

# 민형배 “전남·광주, 섬 정책 수도로 만들 것”

## 해상교통 공영제·기본소득 도입 등 공약 공공의료 확충 포함 섬정책 대전환 발표



교’ 등을 통한 청년 취업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도 약속했다.

특히 해상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선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고 취약항로에 대한 공공 운영과 야간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점 섬 중심 공공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소득 등 7대 공약 제시소규모 섬에는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적 보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섬 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산 식문화, 어촌체험 관광, 위케이션, 로컬 콘텐츠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창업공간과 ‘섬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 섬 생물다양성 수도’를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교통·의료·산업·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25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간”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약 3천300개의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인도서의 약 58%도 전남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민 의원은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삶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권·의료권·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정책으로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공영제’ 구축, 권역별 거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원격의료’ 도입, ‘섬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바람 연금’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섬 특성화 산업’ 육성, ‘청년 창업학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총리 “중동궤 최악상황 대응체계 강화”

##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컨트롤타워 총리 중심 범부처 비상경제본부 운영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청와대 내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워팀’으로 국가 대응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 및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제부총리는 부분부장으로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

산하에는 각 담당 부처의 장관 등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반장으로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 조치를 맡는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인 에너지수급반은 유가·원자재 수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을 반장으로 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도 준비한다.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서민·취약계층 대상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외교부 장관이 반장인 해외상황관리반은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개최된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한 번씩 주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겨내 온 역사가 있다”며 “지금의 중동발 위기가 엄중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번 중동전쟁 대응을 계기로 삼아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조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상익 함평군수, 재선 도전 공식 선언

## 기본소득 등 7대 공약 제시

이상익 함평군수가 6·3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군수는 지난 25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급변하는 지방 시대에 함평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만들고 제 몫을 찾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위기를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군민을 보호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강한 결단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함평은 앞으로 지속 발전을 해야 하는 만큼 제몫을 다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군수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분야 핵심 공약으로 ▲초광역 미래차 산업 거점 완성 ▲농어업 구조 개선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 ▲햇빛 소득 기반 함평형 기본소득 추진 ▲인구소멸 대응 지역 활성화 ▲미래 인재 육성 ▲전국 최고 수준 돌봄 공동체 조성 ▲행정통합 특별지원 효과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이 군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 신인보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베테랑 군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함평=기영규기자

# 조인철 ‘장병적금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25일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

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의 99.9%가 가입할 정도로 장병들 사

이에서 필수적인 ‘국민적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역 후 자산형성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 상담: 062-449-4446